지식경제부 보도자료	http//www.mke.go.kr
'11년 7월 15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자료문의 : 투자정책과장 김선민(2110-5360), 정상용 서기관(2110-5352)	

고도기술 이전 및 고용창출 효과 큰 기업 중점 유치

– 유치규모 확대와 더불어 유치효과 제고를 위한 質的 측면 대폭 보완 –

– 경제적 기여도에 따른 인센티브 체계 개편, 중국 등 對 신흥국 유치활동 강화 –

– 2015년도 연간 유치규모 300억불, 신규 일자리 17만개(누계) 창출 –

□ 정부는 **7월 14일(목)**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**외국인투자위원회**에서 「**제2차 외국인투자 3개년 계획**('11~'13)」을 **확정·발표**

□ 이번 계획은 그간의 외국인 투자유치의 **量的 확대 기조를 확고히** 하는 동시에 **성장기반 확충, 고용창출** 등 **국가 경제적 측면에서의 기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質的 측면을 보완**하는데 초점

□ 정부는 이같은 **새로운 정책적 방향성**에 맞추어 **투자유치 활동**과 **인센티브 시스템** 및 **관련 제도를 개편·정비**하는 한편, **외국인투자환경**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임.

○ 고용창출 등의 **기여도가 높은 분야와 기업**에 대해서 **유치활동을 집중**하는 동시에 이를 **효과적으로 뒷받침** 할 수 있도록 **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시스템도 유치효과를 기반으로 개편**

○ 새로운 **투자유치선 발굴**과 **유치기반 확충**을 위해 선진국 중심의 유치활동을 **중국, 중동, 러시아** 등 **신흥국으로까지 전방위적으로 확대**

○ **민간의 전문성, 자본** 등 유치역량을 적극 활용하고, **유치기관간의 공조채널을 강화**하는 한편 **글로벌 기준** 등에 부합하도록 **외국인투자관련 제도를 정비**

○ **글로벌 수준의 투자환경을 조성**하기 위해 **노사관계·지재권 보호** 등 **경영환경**과 **교육·의료·외국어지원** 등 **생활환경**을 **지속 개선**

□ 한편, 정부는 **2015년도 300억불 유치**와 **17만개 일자리 창출**(누계 기준)을 위해 **이번 계획안을 차질없이 이행**하고 **정부, 지자체는 물론 민·관의 유치역량을 집결해 협력**해 나가기로 하였음.

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외국인투자 유치의 새로운 메커니즘 구축

① **국민경제 기여도**가 높은 유치분야에 대한 **전략적 유치활동 강화**

□ (**미래성장**) 금년중으로 '**신성장동력 투자유치로드맵**'을 수립하고, 시장 성숙도, 기술경쟁력 등에 따라 **투자여건 개선**과 **취약분야 유치에 중점**

○ **신재생공급의무제도**(RPS) 도입('12), **스마트케어사업** 등을 통해 **녹색** 및 **고부가 서비스** 분야의 국내 투자여건을 조성

○ **전기차, IT융복합기기용 반도체** 등 첨단융합 분야는 세계적 **IT·제조기반을 활용,** 국내외기업 **異種산업간 전략적 제휴**를 활성화

□ (**고용창출**) **관광·레저** 등 서비스업, **섬유** 등 **숙련집약형 제조업** 등 고용창출 효과 높은 **그린필드형 투자유치**를 확대

○ 제주헬스케어 등 기 프로젝트의 **성공사례를 창출**하고, **부산신항만** 등 물류·유통 분야는 **배후단지와 연계한 제조업 유치를** 병행

○ **섬유**(동대문, 대구 패션특구), **고부가 식품산업**(전북 국가식품 클러스터) 등 **숙련집약형 산업**은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**선진기업·연구소를 유치**

□ (**지역발전**) 지역별 **생산·연구 인프라, 유망 개발 프로젝트**를 **글로벌 앵커기업과 해외자본 유치**로 적극 연계

○ '**QWL**(Quality of Working Life)**사업**', **경제자유구역 조기개발** 등을 통한 지역 산업 및 투자유치 거점의 **투자여건 개선**

○ 강원 알펜시아, 용산역세권 등 **중화·중동권 국부펀드 투자선호도**에 맞는 **지역개발 프로그램을 상시 발굴·관리**

② **유치효과 제고를 위한 전략적 투자유치**를 뒷받침하는 **인센티브 체계 개편**

□ **미래성장, 고용창출, 지역발전** 등의 **경제적 기여도가 높은 외투기업에 지원이 집중**될 수 있도록 **인센티브별 지원요건을 재조정**하되,

* 외투기업 주요 인센티브 : 조세감면, 입지지원(외투지역), 현금지원(Cash-Grant)

○ **유치효과에 비례**하여 **단계적인 인센티브 지원**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**인센티브別 지원기능 차별화**와 **상호 연계성을 강화*** 함으로써 **전략적 투자유치**에 필요한 유인기능을 강화

* (조세감면) 기본적 지원기능 → (입지) 추가적 유인기능 → (현금) 타겟기업 협상 기능

□ **조세감면**은 **투자유치 대상**에 대한 **기본적인 지원수단으로 활용**

○ 감면대상 **고도기술사업**(현행 서비스업 포함 660여개)에 대해서는 **국내산업 경쟁력 수준, 유치필요성** 등을 **종합 판단**하여 再 **조정**하되, 이미 **범용·상용화**된 **기술**에 대해서는 **과감하게 정비**

* 감면규모는 투자금액 대비 50~70%에 한도내에서 지원하되, 고용증대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규모에 따라 20% 이내에서 추가지원(금년부터 기 시행중)

□ **입지지원**은 **유치효과**에 따라 **추가적인 유인수단**으로 활용

○ 조세감면 요건을 충족하면서 **일정규모 이상 고용창출 등 유치효과가 높은 외투기업**에 대한 **추가적인 레버리지**로서 지원

○ 아울러, **단지형, 개별형, 서비스형** 등 복잡한 **외투지역 지정 제도를 단순화** 해 나가되, 우선적으로는 **개별형 외투지역 중심**으로 운영

□ **현금지원**은 **전략적 타겟팅 분야** 및 **기업**에 대한 **유치협상 수단**으로 **활용**

○ **10대 신성장동력 분야, 글로벌 타겟팅 기업**, 지역발전 기여도 큰 **대형투자 프로젝트** 등 전략적 대상에 대한 **유치 협상력**을 **제고**

○ 지원요건과 지원규모는 **기술이전 효과, 고용창출, 지역발전 기여도** 등이 종합적으로 **반영**하여 결정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

③ **선진국 중심의 투자유치에서 신흥국, 유망국을 포함한 유치선의 다변화**

□ **투자유치기반 확충**을 위해 그간 **미국·EU·일본** 등 **전통 선진국 중심의 유치활동에서 벗어나, 중국·중동·러시아** 등 **거대 자본 및 우수 기술을 보유한 신흥국**으로까지 전방위적으로 **확대**

* 지역별 투자유치 비중('11.상반기) : 미국·EU·일본(75.5%), 기타 국가(24.5%)

○ 특히, 세계 큰 손으로 부각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**협력채널**을 중앙정부 중심에서 **지방정부**와 **민간**으로까지 **확대**하고, **'차이나 데스크'를 중요 거점으로 대폭 확대**('10년 1개소 → '12년 5개소)

* '04~'09년간 중국의 해외투자는 8.7배로 증가(전세계 해외투자는 1.2배로 증가)

○ **러시아·인도** 등 **신흥 유망국**에 대해서는 **상호 강점**을 활용한 **맞춤형 유치전략**을 수립·추진

* 러시아 : 원천기술 보유·CIS 네트워킹, 인도 : IT서비스 등
* 금년도에는 러시아(장관급, 6월 기개최), 인도 등에 대해서 최초 국가 IR 추진

□ **전통 선진국**에 대해서는 **서비스, 첨단융합, 녹색** 등 **미래 유망산업 유치**에 중점을 두고 **다중협력사업**(GAPS) **확대**(제조업→서비스업) 등을 통하여 **글로벌 선진기업 투자유치를 확대**

□ 특히, **FTA 체결(발효)**에 따른 **관세인하 효과** 등의 기회요인을 활용하여 **域內·外 지역 국가**에 대한 **신규투자 유도로 적극 활용**

외국인 투자유치의 거버넌스 혁신

□ **유치주체간 입체적 거버넌스 구축과 민간자원의 활용 극대화**

○ 중앙정부를 구심점으로 **중앙↔지자체·IK↔민간**에 이르는 **국가정책의 수직적인 수립·전파·공유 체계를 확립**

- **외국인투자위원회** 기능을 **정책심의 중심으로 개편**하고, **현행 '외국인투자홍보협의회'를 '외국인투자정책협의회'로 확대·개편**

외국인투자위원회 (정책심의 중심으로 개편) 정책 심의·조정	⇨ 전파	외국인투자정책협의회 (부처, 지자체, 공공기관) 정책의 공유	⇨ 전파	민관 네트워크 정책·IR 등의 공유

○ **중앙↔중앙, 지자체↔IK↔민간**의 **참여와 협력의 수평적 네트워크**를 구축하여 **정책주체간, 지원주체간 공조를 강화**

중앙-중앙	지자체-IK	민-관
'부처 투자유치 책임제'	**'외국인투자정책협의회'**	**'FDI 라운드테이블'***
부처별 유치전략, 투자환경 개선 공조	IR, 홍보 등 지원시책 공조, 투자유치 정보 공유	민간전문가의 정책 참여

* 산업계, 학계, 주한상의, 외투기업 CEO 참여하는 민관 공동 **신설 협의체**

○ **PM**(Project Manager) **제도**를 **민간 중심으로 확대·개편**하고, **외국인투자유치 펀드***를 조성하는 등 **민간의 전문성 및 자본**을 적극 활용

* 금년중 정책금융공사(재원조달)·IK(투자자발굴) 공동 **1천억원** 규모의 '**글로벌 윈윈 펀드**' 조성

□ **외국인투자 제도를 국제기준** 등에 부합하도록 정비

○ **FDI 관리체계* 및 인정기준 개선** 등 **외국인투자 제도를 재정비**

* FDI 관리를 **신고기준과 도착기준을 병행** 적용하되, **점진적으로 도착기준 또는 순유입 기준**으로 전환

편리하고 안전한 투자환경 조성

□ 노사·지재권 등 **경영환경**과 교육·의료·외국어지원 등 **생활환경**을 **글로벌 수준으로 개선**하기 위해 **47개 과제**를 **선정**하여 **추진**

○ **(경영) 복수노조 정착 지원, 지재권 보호**시스템 강화, **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용지 공급** 등 **24개 과제**

○ **(생활) 외국 교육·의료기관 확충** 및 **제도개선, 외국어안내 및 영어방송 서비스 확대, 출입국 편의 지원** 등 **23개 과제**

□ 아울러, **외투기업 애로사항**의 **신속한 발굴 및 해결**을 지원하기 위하여 **외투기업 Hot Line**을 구축하고, **복합·장기지연** 애로사항을 **근원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공동 전담 T/F**를 구성·운영

□ 이번 「**제2차 외국인투자 3개년 계획**」을 **민·관의 유치역량 결집**을 통해 차질 없이 이행할 경우 '**15년도 투자유치 300억불 달성 기대**

* '15년까지 평균 18% 증가시를 가정 = 최근 성장률('09~'10년 14% 증가, '11년 상반기 실적 전년대비 24% 증가)과 정책적 노력 강화 효과 감안

○ 아울러, **외국인투자규모 확대** 및 **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유치 강화** 노력 등을 통해 **'15년까지 신규 일자리 17만개 창출 효과 기대**

* '99~'07년간 FDI 분석결과 10억불 유입시 약 1천5백명 고용창출 효과 ('외국인투자가 설비투자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', 한국은행, 08.4)
* '11~'15년간 총 1,100억불 투자유치시 가정('15년도 300억불)

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 개정 등 기타안건

□ 한편, 이날 위원회에서는 **외국인투자지역의 관리 및 운영 효율**화를 위한 **"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개정(안)"을 심의·확정**

○ **국내기업 해외자회사**를 통한 **우회투자**를 **불인정**하는 규정을 **단지형 외투지역에도 적용**하여 **실질적인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만 외투지역 입주 혜택**을 받을 수 있도록 함

○ **무분별한 단지형 외투지역의 지정 방지**와 **기 지정 외투지역의 조기 활성화 유도**를 위해 **단지형 외투지역 지정요건을 강화**

- **투자신고된 외투기업의 입지수요**가 **단지 면적 대비 60% 이상**(기존 40%)일 경우에만 **단지형 외투지역으로 지정**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
- **단지형 외투지역**에 대해 **입주율 목표관리제**를 도입하여 광역지자체내 외투지역의 **입주율이 80% 미만**인 경우 **추가지정을 제한**

○ **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않은** 외투지역 입주 **외투기업에 대한 임대료 환수규정 마련**

- **사유 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현실 임대료**(5%) **수준으로 환수**

○ ‘10년도 **외국인투자 촉진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**하여 **서비스형 외투지역**의 대상 업종, 임대한도 등 **세부 기준**을 **마련**

□ 이외에도 **개별형 외투지역 신규지정 관련** 4건의 안건을 심의·확정

안건명	지정 효과(사유)	지정 규모	FDI	소관 지자체
한국덴소판매(주) – R&D센터 설립 –	자동차부품 R&D분야 국내유치로 국내 연구인력 연구능력 제고 등 기대	20천㎡	55 백만불	경기
태평양에어콘트롤공업(주)	자동차부품 선진주조공법 도입으로 신규고용창출 및 수입대체 효과 기대	10천㎡	49 백만불	충남
에스에스엘엠(주)	수입의존도 높은 LED용 웨이퍼부품 수입대체효과 및 신규 고용창출 기대	110천㎡	57 백만불	대구
대구텍 유한회사 제2공장	고성능 절삭공구 제조기술 국내도입으로 신규고용창출 및 수입대체 효과 기대	57천㎡	70 백만불	대구

첨부 : ‘제2차 외국인투자 3개년 계획’